2019년 '기록의 날' 기념 학술회의 개최 결과

□ 학술회의 개요

○ 주제 : **「공공기록법」 시행 20년의 성찰과 과제**

- (기조연설)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 20년을 돌아보며 // 설문원 교수(부산대)
- (주제발표) ① 기록관리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짧은 생각 // 김장환 연구관(국회기록보존소)
  ② 공공기록법 3.0을 지향하며 : 지향적 기록화 · 아카이브 분권 · 거버넌스형 전문성 // 이승억 과장(국가기록원)
- (종합토론) 좌장(설문원 교수), 발표자, 김유승 교수(중앙대), 김계수 연구관(문화재청), 안대희 연구관(국가기록원)

○ 일시/장소 : '19. 6. 7.(금) 14:45~17:00 / 나라기록관 4층 대강당

○ 참석자 : 총 331명

- (내부) 원장님, 부·관장 및 부서장 등 원내 직원 135명
- (외부) 기록관리 관련 학·협회, 대학교, 기관 기록관리 담당자 등 196명

※ 공공기관(46명), 교육청(38명), 중앙행정(36명), 지방행정(33명), 대학기관(10명), 대학 교수·학생(14명), 군기관(7명), 영구기록물관리기관(8명), 기록관리 협회(2명), 기타(2명)

□ 추진 성과

○ **기관과 학계 연계형** 전문가 발표·토론 중심의 **'열린 논의의 장'** 마련

○ **학술회의 자료집 및 영상녹화물의 온·오프라인 제공**

- 자료집 현장 배포 및 전자파일(pdf) 온라인 제공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 학술회의 발표·토론 현장 영상 제작·활용 * 기록On 게시 예정

□ 주요 논의 내용

○ 기록평가정책에 기초한 설명책임성 기반의 사회적 기반 신뢰 구축 방안

○ 기록공동체의 전문성 확립과 지역화를 통한 기록관리 문화 확산 방안

○ 지향적 기록화, 아카이브 분권, 거버넌스형 전문성 등 공공기록법 3.0 지향 방안

붙임 1 주요 질의 및 응답

○ **(김유승 교수)** ① 공공영역으로의 집중과 불균형적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이것이 공공영역 발전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임. 다만, 기록생태계의 공공영역을 정의 하는 기준은 공익이 되어야 하며, 기록생태계의 공공영역은 정부역영과 함께 마을 아카이브, 시민운동 아카이브 등의 시민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함.

② 지속가능한 기록생태계를 위한 혁신에서 전문성은 넘어야 할 큰 산으로, 기록전문가 교육, 양성 과정은 일원화되어야 하며, 전임교원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최소한의 공통적 교수학습 활동이 담보되도록 강제하여야 함.

○ **(김계수 연구관)** ① 기록학 대학원 인증제와 전임교원 확보,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공감함. 다만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으로 학계 자체가 대안을 갖고 추진하기에는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한계가 있을 것임. 그런 점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기록학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모으고, 표준화된 교육과제, 민간 아카이브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등을 논의해서 각 대학의 형편에 맞게 커리큘럼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학원을 접목해나가면 좋을 듯함.

② IT 기록관리 환경이 발전해가면서 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와 활용이 강조되는 흐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전문가를 역사, 문헌정보학 등과 같은 특정 학문에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문화콘텐츠학, 전산학, 건축학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여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 분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봄.

=> (김장환 연구관) 기본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공통지적 분야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세분화된 지식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숙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다만, 현재의 대학원이 공공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민간영역도 염두에 둔 지식 영역과 그 지식 영역에 기반한 정합성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봄. 그런 점에서 노동 분야,

아트 분야 등은 현장에서 숙련된 기록전문가들이 양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입장은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민간 문화가 어떻게 하면 민간영역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나온 제안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음.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경우 비판적인 입장도 있지만, 단순히 관이 무엇을 지원해주고 진행시키는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떻게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방안 중의 하나임.

○ **(안대희 연구관)** ① 기록학이 학문 영역에서 출발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학계 내부적으로 학문적 토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었으면 함. 따라서 인증제를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주임교수협의회처럼 기록관리 전문대학원의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② 전문요원자격제도와 관련해서 자격요건에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 현재 대학원과 교육원을 통해서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임. 민간영역을 포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전문성의 영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봄. 10여 년 전 내부규제라고 해서 다양한 논의와 고민들이 있었는데, 10년 이후에 그것들이 과연 전문성을 담보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민간영역까지 확대한다고 할 때 현행 제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을 것임.

=> (김장환 연구관) 자격제도를 비롯해서 현재 아키비스트와 레코드매니저가 통합되는 전문요원, 특히 공공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임. 미국의 경우도 ACA(The Academy of Certified Archivists), ICRM(Institute of Certified Records Manabers) 기관이 별도 주관해서 아키비스트 자격을 부여하고 있듯이, 우리도 민간 전문가 협회에서 전문영역을 세분화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모델을 생각했던 것임.

③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적극 모색해 주었으면 함. 전문가 단체, 학회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수용・소통해야 할 것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들을 좀 더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전문가 단체의 역할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음.

④ 건강한 기록관리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법령 상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체계에 대한 변화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자율과 분권이 발전하는 변화에 조응하는 각급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아카이브 영역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봄.

⑤ 의미론적 지향성, 지향적 기록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기록의 평가론적 관점에서 현재의 관리체계(평가체계)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기록의 범위·대상에 대한 논쟁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를 설명 부탁드림.

=> (이승억 과장) 지향적이라는 표현은 기록관리법이 앞으로 유력한 법이 되기 위해서 절차 위에서 임의 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임. 이제는 절차를 갖추어야만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록화에 부합하는 절차가 따라가야 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실무적 차원에서 중앙아카이브의 기본적인 역할들이 특정 기관이나 주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어떤 특정의 기록들이 남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볼 수 있음. 따라서 국가기록원도 일정한 지향성이나 주제성을 갖춘 구체적인 수집・선별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지향적 기록화라고 하는 업무영역이 기록관리 종사자들가 가진 권한의 근거,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말한 것임.

⑥ 현 체제를 유지하되 '기록 부존재 공익심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떠한지?

=> (이승억 과장) 부존재 공익심사제도는 개인적으로는 검토해봄직한 제도라고 생각함. 미국처럼 거창하게 아너(honor)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의 정책지향성을 전제로 해서 각 기관 분야 별로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면 평상시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다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자기 책임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부존재 공익심사제도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향적 기록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함.

○ **(이경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관리전문가의 자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진출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요즘 대학에서 복수전공제를 채택하듯이 기록학도 꼭 문헌정보학, 역사학을 전공해야만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기 보다 공공기록물이든 민간기록물이든 각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기록관리 분야를 공부함으로 해서 각 분야에 대한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함.

=> (설문원 교수) 이미 대학원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기록학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고, 특별히 대학원 전공에 학부 전공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

붙임 2 2019년 '기록의 날' 기념 학술회의 모습









